

2016-04-30

SSK 4월 월례회

## Foundation of Regional Integration: Common or Divergent Interests?

발표 : 이용욱 교수님

### Q&A

1. 신옥희: 기본적으로 찬성. 그러나 diversion interests 그것만인가 하면 아닐 것 같아. Common interest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으면 가능할 것인가. 프랑스와 독일이 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ex. 지역질서 등. Common interest 가 아니라, diversion interest가 institution 만드는 데 중요하다.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common한 것 없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것. 또 전망이론이랑은 좀 다를 것 같고. 무엇이 common한가 등 고민필요.

두번째는, 사례를 살펴봤을 때, 프,일 돈을 추구/ 중,독은 ideal 한 것도 과연 그런가. 복합적일것 같다. 중국이 어떻게 material한 것 없이 가능할것인가. Dichotomize 될 수 있는가. Common interest 기대가 들어가면 좀더 설명력있지 않을까. 동상이몽일 수 있을까.

세번째는, 요즘 삼각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양자관계만 보고 있어서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 유럽을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영국 빼고? 미국 빼고? 프,독+영, 중,일 +미의 관계는 어떻게 될것인가 궁금하다. 통화분야에서는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Interest 협력 문제를 본다면 과연 이렇게 수평적인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2. 조은정: 어떻게 비교가 가능할지에 대한 방법론 적인 solution을 제안하고 싶다. EMU가 선생님 thesis를 설명하기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모라비츠 이후로 이렇다할 주장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그는 이것을 이야기 함으로써 euro-sceptic해서 비판을 받았었다. 1950년대부터 문서를 보면, 이해는 이미 divergent하기는데, perception에서만 왜 유독 common하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실제고 하게된다. 모라비치를 넘어선 상세한 설명을 하려면, 문서를 뒤져야할텐데 그러려면 너무나 방대해지고, 대안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divergent interest 성격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것은 협력적, 어떤 것은 conflicting한지, 상호보완적인지 성격규정.

모라비치 문헌연구에 더해서 치앙마이 케이스에 포커스 하고 divergent interest 성격 규정을 해본다면, solid하면서도 manageable한 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신기영: EMU 어떻게 가능했냐에 대해서 썼었는데, 독일 중앙은행에 주목해서 본거였다. 이해가 다른데, 하나의 제도로 이루어졌잖아. 금융정책은 몇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라는 독일중앙은행이 가진 의지가 워낙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 20-30년대부터 역사적으로도 확고하게 움직일 수 없는 정책으로. 중앙은행이라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립된 것이고. 독일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라는 아이디어가 다른 나라에 얼마나 공유되었는가가 중요했다고 본다. 독일이 threat를 제거하기 위해서만 이것을 실행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policy idea가 share되는 것이 독일이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독일에게 유리했다.

또 한가지는, 동남아에서 이미 중국 돈을 이미 사용하고 있던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미 informally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통화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데 한가지 고려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조수현: 예를들어, 기후변화협약 같은 문제에서도 과연 divergent interest가 영향을 미칠까. interest 추구에도 층위가 있지 않을까. 이미 common interest가 기후변화로 있고 난 다음이 아닐까. Common interest가 본질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divergent interest가 있는 것이 아닌가. Common interest가 없는 상황에서도 divergent interest만으로도 institution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

5. 정주연 : interest에 ambiguity가 있다는 것은 재미있는 포인트, 그러나 divergent interest가 있을 때, cooperation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Interest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interest라는게 동기? 수단? Goal? 목적? Gain? 각자의 케이스 마다 다른 정의로 적용되어버리면 너무 뻘하고 당연한 얘기로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의도와 동기가 계속 변화하는 것.

또 한가지는, 'interest가 divergent 하니까 아예 안 부딪힌다.'에 관하여. 모두가 다른 곳을 보고있으면 협력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shared something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의도, 동기, 목적, gain 그것이 무엇이든 share 정도의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든다. 혹은 아니면 여러가지 층위 중에서 어떠한 한 개가 share되어야 한다는 건가.

→ 이용욱 답변: 첫번째는, 아무것도 common한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협력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슈를, Typology를 통해 나눠 볼 것인가, 종류의 문제인가. 정도의 문제인가. 고민중. 그리고 common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paper이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divergent가 나온 것이고. 음악에서 싱크페이션(엇박자)으로 인한 것도 듣기가 좋잖아.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지는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Empirical study면에서, interest가 층위가 다른 것이 많은데, 그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독일이 원하

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당시 유럽 integration을 위한 것이었는가. 뭐 정말인지는 또 다시 고려해봐야할 다른 문제이지만. 아무튼 empirical study에서도 연구가 마다 중요하다고 보는 지점이 다른데 이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유럽사례는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관심을 오히려 동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유럽은 소개하는 정도, 그리고 연구사례는 동아시아에 집중할 생각이다. 그런데 삼각관계를 고려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영불독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미 있긴 하다. 저의 연구에서는 일본-중국이 중요했다.

Divergent의 성격규정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매우 중요하긴 하겠지만. Reciprocal expectation이 있는가, 아니면 conflictual한 거냐. 한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동상이몽'이다. 제연구는 당연하다고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주연교수님이 말씀 하신대로 divergent interest가 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왜 학계에서는 common이라고 하는가. 제생각에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common이라고 믿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협력이 되니까. common이라는 표현 안에 있는 divergent. 레토릭 파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한 interest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어렵다. Preference를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Divergent interest여도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도 안 뺏기고 싶은 상황이 있긴 할텐데,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긴 해야할 듯.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 해야 할 것 같다.

6. 김애경: 동아시아에서 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interest 가 너무 달라서 그렇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다면 divergent 하기 때문에 제도가 공고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또 유럽과 다르게 중앙은행도 없고. 이게 오히려 결국 제도가 공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이 와해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도 아닌가.

→ 이용욱 답변: paper가 연구하는 것과 연구하지 못하는 부분을 확실히 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협력에서는 일단 무언가 common이 있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생각인거 같아요. 그리고 제도가 Divergent하기 때문에 깨진다는 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complexity관점에서 interaction에서 제3의 것이 생긴다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협력을 공고화 하느냐 아니냐는 역사적인 연구로 가능할 것 같다.

7. 전재성: 이번 연구는 합리주의 안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하나의 정책이 하나의 이해만 갖는 것은 아니다. 위기 공동에 대한 공동이해는 있되, 각각의 또다른 이해는 . 그 여러가지 interest중에 가장 큰 층위의 interest가 성립되면, 제도는 성립이 되는데, 그 밑의 divergent interest는 다른 형식으로 제도안에 나타나는 것 같다. 제도의 지분이나, 멤버십, 제도적 design으로 나타날 것 같다. Institutional balancing이라고 합쳐서 말씀하셨는데, 즉, institutional cooperation 과 power balancing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paper에서 다루실 때, liberalism과 realism이 상반된다는 전제하에 쓰면 안될 것 같고, liberal realism도 있고, realist적인 liberalism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에 여러가지가 mix된 형태를 쓰는 게 좋

을 것 같다. 협력과 견제의 메커니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8. 은용수: 한가지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음악에서 서로 다른 멜로디가 합쳐졌을 때 하모니가 생기는 콘트라포르트리? 콘트라포스토? Global IR에서 서양과 비서양을 어떻게 합칠 수 있느냐에서 봤던 개념.

또 한가지는 Divergent interest가 지역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trade off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러려면 communication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로 '제도가 있어야 divergent interest를 common하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9. 이정환: regional integration을 통화의 측면에서는, 통화안정성이라는 기본 이해가 이미 있는 것이 아닌가. 투자와 통화를 나누어야 할 것 같다. AIIB와 ADB가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competing하고 제도도 없는데 협력할 수 있다는 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 이용욱 답변 : 동상이몽에도 몽은 있어야 한다. AIIB와 ADB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재미있는 케이스이다. Common 한 것도 없고, 오히려 competing한 관계라서, 정말 divergent한 관계가 협력을 만들고 있다는 사례도 될 것 같다. 다른 idea로 같은 goal.

## 2000년대 자민당 온건보수의 향방

### -신YKK 정치연대의 아시아 증시 외교노선의 성격과 몰락

발표: 이정환교수님

#### Q&A

1. 신기영 : 일본의 보수 우경화라는 것이 정치 핫토픽이고, 일본 내부에서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본 자민당 내의 보수 우경화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도 있고. 그래서 alternative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카노상 등 보수연합의 변화들을 설명하는 방식. 혹은 자민당의 역사적 변화, 90년대 이후 선거제도의 변화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 동의. 한가지 질문은, 아베의 가치관 외교에 대한 것. 중국, 한국, 북한에 대한 보편적인 언어(민주주의 등 서양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같은데 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는 게 생각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사회에 대한 어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UN에 가서 위안부에 대해 돈 주겠다 뭐 이런 행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과 글로벌 사회에 대한 어필을 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00년대에 반 gender정책과 아베의 성장이 일치했던 경향이 있다. 당시 보수 잡지에서 일본에 있어서 위험한 단어 10개 중 '인권, 젠더, 페미니즘 등...' 비슷한 그룹에 있던 아베가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 그러한 전략에서 그러한 것 같다.

- 이정환 답변 : 아직 description에 그친다. 93년의 정치변화가 구조적 변화가 맞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 Idea가 어떻게 정치적 그룹들 사이에서 소통되는 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

2. 신육희: ideation change가 한국에 좋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말하면 국가와 일본이 맞닿아 있고 지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을 더 과격하게 보게 만든다. 일본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본 또 다르게 앞서나간다. 한국중국은 또 배워야 한다.'는 여전한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역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보편으로 가면서 지역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지정학적 관념적인 것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의문이 드는 것이, 요시다에게 지역이라는 것이 삼분주의의 하나였는가, 아니라고 생각. 지금도 아닌 것 같고. 조건들이 중요할 텐데, 지정학적구조, 국내정치가 중요했다. 그래서 실용주의가 중요한 것이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아시아로 오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반면 일본의 기업, 시민사회가 중국

의 성장을 어떻게 여기고, 어떤 전략적 자세를 띄게 하는가.

- 이정환 답변: 아베 가치관에서 보편주의 언어 라는게 반지역적인 아시아지역에서 살아가고, 또 제국주의관점 고수, 보편주의 세력의 영향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1990년대 일본의 국가관이 4가지가 있다. (미들파워-고노, 보통국가론, 무장국가론, 평화국가론) 하는데, 지금의 보통국가론과 상관없게 된, 지금의 보수우파의 관점과 달라진 것이 아닌가. 일단 90년대 과거사 정책과 더불어서 일본의 중상주의 등 90년대 돌파구를 찾을 만한 게 있었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 것인 인권과 인간안보였다. 그래서 human security라는 아이디어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려고 노력. 이것이 98, 99년까지 계속 된다. 물론 캐나다와 일본의 인권, 인간안보 개념이 좀 다른데, 그런데 당시 일본 내에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역사검토위원회 같은 그룹들은 일본 내에서 암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걸끄러워했다. 일본 내 안전 안심과 북한남치 등의 문제와 결합이 되면서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 국제사회에의 어필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우파들이 쓰는 데 거리낌 없게 된 것은 북 남치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일본을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가. 그러한 기업과 시민사회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변화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기업과 정부의 나라인 것 같은데, 기업 면에서 한국보다 중국의 의존도는 낮은 것 같은데, 한국보다 동남아와의 상호연관성은 여전히 높고. 그런데 중국과 동남아를 분리할 수 있을 것이냐. 또한 과연 일본의 대기업들이 압력단체로서 아시아에 대한 실용주의 노선의 견인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동남아 일본의 생산구조를 고려해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그래서 ASEAN +3 협력을 창출할 수 있다면, 단순히 무역이 증가가 아니라,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가 기업들이 주는 영향, 어떻게 압력 할 수 있는지가 나올 것 같다.

3. 김지영: 가치중심 외교노선과 현실중심의 외교노선을 나누었는데, 일본의 외교노선 기원, 역사적 기원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동아시아를 전체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외교정책인지, 아니면 일본 내 계파만의 것인지. 한국처럼 학계나 정치계 시민사회계가 묶여 있는가. 아님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외교노선인지.

→ 이정환 답변 : 분명히 정치인들이 각각 만나는 그룹들이 다르다.

4. 신기영: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일본 내에 국제주의, 즉 냉전 이후에 글로벌에 부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90년대 급부상했다가 2000년대 들어서 주춤하고 미국 주도의 질서 성장. 이러한 국제주의 이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5. 홍성표: 첫번째 질문은 신ykk내에서도 즉, 현실주의 내에서도 양쪽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신사참배에서 사적참배와 공적참배에 따라 허가여부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학문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 두번째 질문은, 이것에 대해 한국의 반응. 신사참배에 대해 이론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두가지. 1) 공적 안돼, 사적 오케이 2) 공적참배도 안돼, 사적도 안돼. 그런데 실제로는 두가지에서 벗어나는 케이스가 발생. 95년 하지모토가 할 땐 반응 없다가, 2006년 아베했을 때는 공적이고 사적이고 비밀이고 반발. 한국의 기준을 잘모르겠다.

- ➔ 이정환 답변: 야마자키의 생각을 추측건데, 신사참배에 가치부여를 하는 자였던 거야. 일본인 이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 단 귀찮은 일은 만들지 말자고 생각. 그리고 사적참배 공적참배에 관해서는, 총리가 하는 것이 사적참배일 수가 없고, 그래서 한국의 입장은 둘을 구분하지 말자는 견해인 것 같다.
- ➔ 은용수: 시대의 파벌에 따라서 자기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다르게 반응한 것 아닐까.
- ➔ 신기영: 고이즈미는 튀는 걸 좋아해서, 아베는 마음도 진짜 참배하고 싶고, 파급효과 이해하면서 했다.
- ➔ 이정환: 반응이 두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